

# 정세균 “특검연장法도 직권상정 어렵다”

### “법사위 거쳐야” 입장 고수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여야 3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연장법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이런 의사를 나타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의장은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전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옳고 정 의장도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의장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는 입장도 전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만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野, 같은 자리 다른 시선 지난 28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야당 4+4 회동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특검연장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검찰이 국민적 기대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야 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

한편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8일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김관영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일정을 3월3일부터 4월1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긴급현안질문을 3월16일과 17일 이틀간 열며 집의 의원은 10명, 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정했다. 본회의는 3월28일과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4야, 박영수 특검 연장법 개정안 발의

야 4당은 지난 28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박영수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검이 만료되는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돼 기존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기록 및 위증고발사건을 15호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히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된 문구에서 ‘1~15호’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관련’

이라는 표현이 특검 수사를 발목 잡았다는 판단에서다. 야 4당은 이를 통해 특검이 인지한 모든 불법사황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인력과 관련해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중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귀한 검사에 대해서도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수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었다.

야 4당은 박영수 특검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제정안이 아닌 기존 특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단 법사위에서는 논의의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야, 특검연장 무산에 ‘네 탓’ 신경전

### 박지원 “文탓 총리교체 못해”...추미애 “그럼 탄핵 불발”

국민의당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거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틀째 파상공세를 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일을 예상했기에 ‘선(先)총리 후(後)탄핵’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혁명적 청소’를 운운하며 거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어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개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4+4 회동’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특검연장 불발의 원인이 애당초 황 총리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것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거부하신 분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립적 내각, 거국내각이 됐다면 탄핵이 안 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면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먼저 “선 총리교체 제안은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타협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총리를 두고 정치권이 잿밭 놀음을 했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남 탓보다 공조를 해야 한다”고 박 대표를 직격했다.

이에 박 대표는 “남 탓이 아니다. 중립적인 거국내각을 했다면 탄핵이 안 됐으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치는 등 감정싸움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구무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표에 대해 “특검 주자를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이지 않나”라며 “야당이 공개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문 후보는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임동욱기자 tuim@

## 민주 개헌파 의원들에 문자폭탄

### 개헌 워크숍 후 비난·욕설...文 “자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대선 경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고 항의를 치르고 있다.

당내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 등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24일 개헌 워크숍을 열고, 당이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이후부터 ‘자유한국당의 2중대’라는 비난에서부터 거친 말과 욕설이 담긴 ‘저주의 글’ 등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자유한국

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3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오만’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이 개헌파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며 “조직 폭력배 집단도 아니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분노했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당내 개헌파 의원들에 대한 항의성 ‘문자폭탄’에 대해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 결렬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 협상에 애초 정한 기한인 지난 28일에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경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여의도 당사에서 협상을 벌였다.

오전 협상에서는 각 대리인 측은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먼저 안 전 대표 측은 현상유지 40%·여론조사 30%·공론조사 30%로 후보를 뽑자는 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박원순-박영선 후보 경선 룰과 흡사한 것이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모바일 투표를 배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안 전 대표 측은 무작위로 뽑는 배심위원을 통해 이뤄지는 공론조사

는 사실상 여론조사와 같다면 안 전 대표 측은 제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전 대표 측은 현상유지 절반에 나머지 50%는 세 후보 측이 각각 3분의 1씩 뽑는 배심위원이 후보 간 토론을 지켜본 다음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안 전 대표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양측은 오후 들어 다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와 현상유지의 비율을 조정할 안을 들고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측은 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이날 안에 경선룰을 마무리하기로 한 애초 합의의 지키지 못하게 됐다. 탄핵 직후인 내달 중순부터 경선에 돌입해 25~26일경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겠다는 애초 계획 자체가 무기한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홍준표 “1위 후보 대장 뇌물 먹고 자살”

### 文 겨냥 막말...민주 “인두겁 썼다고 다 사람은 아냐”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8일 “지금 (더불어)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외 한 식당에서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라는 질문을 받아 이같이 답했다.

이는 대선레이스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의 지지율이 3% 이상 나왔다는

지적에는 “3%는 좀 그렇다. 그것도 지지율인가”라면서도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은, ARS 여론조사는 국민의 97~98%가 응하지 않는다. 대면 여론조사 응답률도 10% 내외”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홍 지사의) 인품이 고작 이런 수준이라니 참담하다”며 “인적 수양부터 다시 하라”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두겁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홍 지사, 당신이 몸담은 정권의 보복·기회 수사에 의해 지옥을 당하다 돌아간 분에게 어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

## 경매/매매

###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b>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b>  대지 370평, 건물 97평 최저가 681,578,000 감청가 1,217,104,900	<b>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b>  대지 261평, 건물 458평 최저가 1,450,531,000 최고가 2,072,187,000	<b>문화의전당 옆 오피스텔</b>  대지 215평, 건물 467평 최저가 1,492,071,000 감청가 2,131,071,000	<b>중흥동 상업지역 토지</b>  대지 612평 최저가 2,126,985,000 감청가 3,038,985,000
<b>북구 중흥동 숙박시설</b>  대지 91평, 건물 340평 최저가 425,000,000 최고가 948,794,100	<b>화정동 상가사무실</b>  대지 48평, 건물 160평 최저가 382,407,650 감청가 382,407,650	<b>운림동 기전빌라</b>  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중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 45만원	<b>제일오피스텔 29층</b>  감청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